

# 광주 발전 핵심 프로젝트 국정과제 반영 총력전

姜시장, 국정위·국방부·국회 릴레이 방문  
민군 통합공항 이전·AI 인프라 등 요청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중심 소통 강화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방부, 국회 등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며 광주 발전 10대 프로젝트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채택에 총력전을 펼쳤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창성동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강 시장은 "AI(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기업, 인력 등 국내 최고 AI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 곳이 광주"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AI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구축, AX실증밸리 조성,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강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광주 발전 10대 프로젝트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발전 10대 핵심 프로젝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구축 ▲AX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AI 기반 미래차 판기술 클러스터 조성 ▲국가 주도 5·18 주요 사적지 보존 활용 ▲광역 MVDC 기술 개발·전력망 구축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 확장 ▲아시아 문화콘텐츠 허브 도시 조성 ▲국립 문화시설 유지·조성 ▲국가AI 혁신연구원 설립 및 AX초격차 융합인재 양성 등이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국회 방문에 앞서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면담을 갖고 광주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강 시장은 "광주 민·군통합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정부 전담팀(TF)"을 서둘러 구성해 통합공항 이전 논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공항 소음 문제와 관련, 국방부가 무안군의 동의를 받아 공항공사와 협의해 실제 전투기를 무안공항에 띄워 검증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민·군 통합공항 이전은 지자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방부가 주도해 서남권 관문공항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지난날 24일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한주 위원장을 만나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구축, AX실증밸리 조성 등 광주 발전 핵심 과제를 국정과제에 우선 순위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 제공)

을 만나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구축, AX 실증밸리(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신속 추진 등을 건의한 바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중심으로 국정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해 광주 발전 핵심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수희 기자

## ‘굴 해상 채취’도 외국인 계절근로제 적용

전남도 건의 반영...하반기부터 도입  
규제 해소로 양식이가 인력난 '숨통'

최근 개정된 올해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그동안 농업 분야 허용·적용 업종에서 제외됐던 굴 해상 채취가 포함돼 양식이가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다. 하지만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돼 9·4월 겨울철 집중 수확기마다 양식어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과 적용 업종 확대(선별·세척·포장 등 굴 육상 가공→모찌기·단련·수하·양식·채취 등 해상 채취)를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 3월부터 2025년 전남도 중앙규제 개선 과제 안전 제출, 전남도·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탄력분을 일부 배정받아 굴 어업인의 요청대로 즉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박영재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로서 굴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5개년 굴 양식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 지원하고 있다"며 "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인력수급 등 기초적 부분부터 어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 광주시, '채무조정비용 지원' 전국 최초 시행

접수수료 5만원...취약층 금융회복 유도

광주시는 7일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금융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비용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시민들이 겪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상담·

연계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중위소득 70% 이하 시민이다. 지원금은 채무조정 접수시 발생하는 수수료 5만원이다.

세부 기준과 신청 방법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 사업이 금융 회복의 출발점에서 생기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시민이 채무조정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수희 기자

## 전남도 "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 최선"

전남도는 7일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새 정부와 함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 국가 차원의 위령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날 김규용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7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인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깊이 헤아려 여순사건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여수를 찾아 "여순사건은 근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확한 역사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역시 여순사건 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역대 도지사 최초로 김영록 지사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한 데 이어,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2024년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유족들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새 정부와 협력해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인사들로 재편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위령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완수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월곡동 시민안심센터**  
**치안 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

월곡동 치안만족도 조사 및 집중 순찰 구역 의견을 연중무휴로 받고 있습니다.

- 기간** 연중무휴
- 대상** 월곡동 시민 누구나
-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후 설문조사 진행
- 내용** 치안 만족도 조사, 집중 순찰구역 의견수렴 등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월곡동을 더욱 안전하게 합니다

광산구 광주광산경찰서